

한국의 실업: 구조와 동향

방 하 남 (한국노동연구원)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동시장에의 참여와 고용기회의 보장은 사회적 구성원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 1의 요건이다. 맑스가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노동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며 본질적인 행위인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고용은 인간과 그가 속한 사회의 삶의 내용과 질을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고용의 기회와 구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K. Marx, 1844;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회칙, 1981).

그러나 1990년대 말의 IMF 경제위기와 2000년대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 노동시장의 잠재되어 있던 취약구조를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불안과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취약구조 속에는 협소한 임금섹터(넓은 자영업섹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현격한 격차로 인한 이중구조, 그리고 높은 비정규직 비율, 조기강제퇴직제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과거의 고도성장시대가 막을 내리고 경제가 이제 중·저 성장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의 증대 등 외부환경의 변화는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기업 측에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맞추어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의 공급측면에서는 청년층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중고령층의 조기퇴직과 지속적인 소득활동의 필요성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경쟁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공급과잉이 누적되고 있는 청년층 노동시장에서의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실업’은 노동시장의 고용사정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점추정치(point estimate)인 ‘실업률’을 통해 그 정도와 규모가 측정된다. 그러나 ‘실업률’ 자체만 가지고는 고용사정의 양과 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타당한 지적이 된다. 즉 한국은 어느 OECD 국가들보다 통계적 실업률이 낮은 나라이며 이는 IMF 경제위기 때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어느 국가들보다 고용이 불안한 노동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노사갈등의 제 1주제는 고용보장이다(OECD, 2007). 실제로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공식 실업률이 나타내는 것보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고용사정이 매우 안 좋은 편이다.¹⁾

본 고에서는 고용불안의 현실태인 실업의 장기 추이와 구조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의 현 주소를 조명해 보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1. 실업의 동향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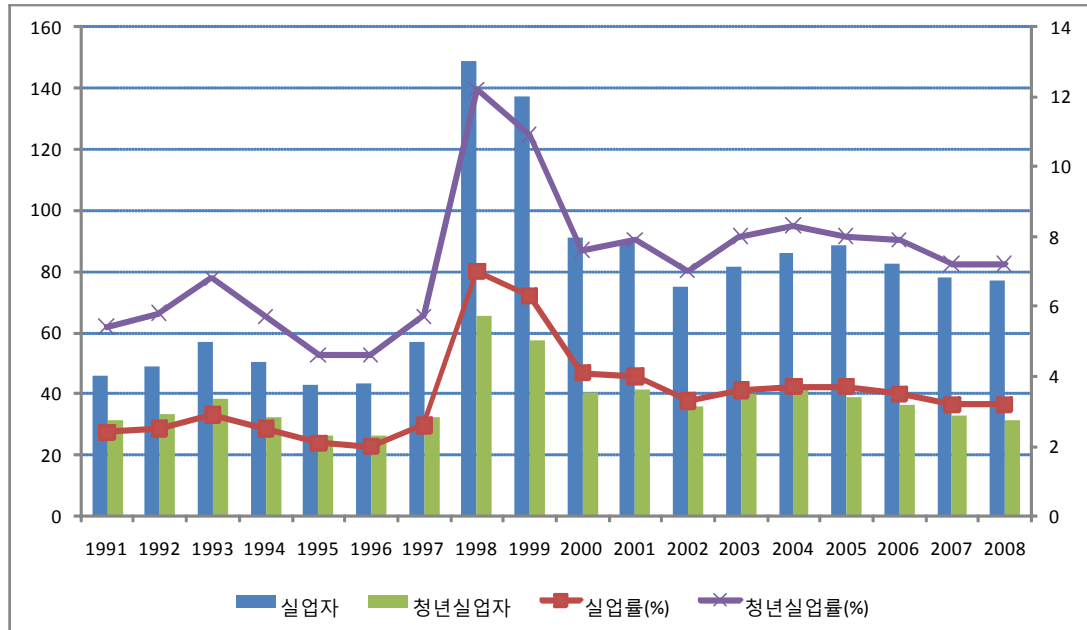
가. 실업률 장기추이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자는 ILO기준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일주일 동안 ① 직장 없이(without work),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③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개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실업은 장기와 단기실업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장기실업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를 지칭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12개월 이상을 장기실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래 [그림 1]에서는 1991년 이래 실업자수와 실업률 추이를 보여준다. 1997년 이전까지 2~3%에 머물던 실업률은 1998-1999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7%까지 상승을 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09년 9월 현재 3.5% (841천명)대에 머물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일반 실업률과 동일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수준은 일반 실업률의 1.5~2배 수준을 기록해 왔으며 현재는 8%대에 머물고 있다.

1) 이 때문에 언론들은 공식 실업률에 대하여 ‘체감실업률’ ‘실질 실업자’ ‘취업애로층’ ‘사실상 백수’와 같은 주관적 지표들을 만들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사실상 백수 358만 명, 사상최대’ 연합뉴스 2009. 3. 29), ‘사실상 백수 341만 명’경향 2009. 3. 18), ‘실질 실업자는 329만5천 명’인천일보 2009. 3. 11), ‘취업애로인구 350만 명 육박’한겨레 2009. 2. 17) 등.

[그림 1] 실업률 장기 추이: 1991-20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1991-2008), 원자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실업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표 1>). 실업률이 급속히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1997년 외환위기 직후조차도 지표상의 실업률 자체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유럽이나 영미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 보다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비율, 즉 유희율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실업률이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데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높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많은 경우 실업률은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1> 주요국의 연령대별 실업률 (2008년 기준)

(단위 : %)

	한 국	일 본	호 주	프 랑 스	독 일	스 웨 덴	영 국	미 국
전 체	3.4	4.1	4.4	8.1	8.8	6.2	5.3	4.7
15~24세	8.8	7.7	9.4	19.6	12.4	18.9	14.4	10.5
25~54세	3.1	3.7	3.4	6.8	7.9	4.4	3.7	3.7
55~64세	2.2	3.4	2.7	6.6	11.8	3.9	3.3	3.1

주: 전체 실업률은 15~64세 기준임(OECD 기준). 단, 스웨덴·영국·미국의 경우는 16~64세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나. 계층별(성, 학력) 실업률 격차²⁾

<표 2-1>과 <표 2-2>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률의 격차와 장기추이(1988, 1998, 2006)를 보여준다. 먼저 핵심노동력인 장년층 남성을 살펴보면 1986년, 1996년에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았지만, 2006년에는 중졸 이하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졸, 대졸 이상으로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과 중고령층에서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남성 청년층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고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중졸 이하 또는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더 높다. 이에 비해 장년층이나 중고령층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일관되게 낮다. 이에 비해 20여 년 전에는 장년층 이하에서는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자보다 높았으며, 중고령층에서만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더 낮았다.

여성의 경우 학력수준과 실업률의 관계는 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장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1986년에는 고학력자일수록 실업률이 더 높지만 2006년에는 대졸자의 실업률이 고졸자에 비해 낮아졌다. 다만 여성의 경우 중졸이하자의 실업률이 여전히 고졸자에 비해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과 실업률의 관계 역시 남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아직 재학중인 인구가 더 많은 청소년층(15~24)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과거에는 대졸이상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고졸 혹은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는 그 격차가 많이 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대부분 학령기를 지난 청장년층(25~49), 특히 남성의 경우는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고졸 혹은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실업률보다 더 낮고 이는 중고령층(50~64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학력 계층간 실업률 격차 변한 주된 이유는 1998년 외환 위기이후 모든 연령계층에서 중졸 이하 혹은 고졸자들의 실업률이 대졸자들에 비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경제위기와 산업구조변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이 저학력-저기술 인력인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 본 절의 내용은 김혜원(2008)에 의거하고 있다.

<표 2-1> 남성의 연령별, 학력별 실업률 추이 (1988, 1998, 2006)

연 령	교육수준	1986	1996	2006
전 체	중졸 이하	3.80	1.63	3.94
	고졸	6.15	2.81	4.61
	대졸 이상	5.80	2.21	2.77
15~24세	중졸 이하	8.01	8.94	13.71
	고졸	14.72	7.95	11.40
	대졸 이상	30.24	14.59	14.00
25~49세	중졸 이하	3.82	1.59	4.91
	고졸	4.72	2.15	4.28
	대졸 이상	5.68	2.35	2.79
50~64세	중졸 이하	1.89	0.88	2.92
	고졸	3.20	1.62	2.75
	대졸 이상	2.17	0.46	2.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2>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실업률 추이 (1988, 1998, 2006)

연 령	교육수준	1986	1996	2006
전 체	중졸 이하	0.74	0.74	1.83
	고졸	4.52	2.33	3.62
	대졸 이상	8.77	2.38	3.43
15~24세	중졸 이하	2.34	7.56	10.66
	고졸	7.21	4.50	8.14
	대졸 이상	23.50	6.51	12.30
25~49세	중졸 이하	0.68	0.72	2.10
	고졸	1.35	1.17	2.82
	대졸 이상	2.16	1.54	2.43
50~64세	중졸 이하	0.21	0.39	1.39
	고졸	0.55	0.41	1.50
	대졸 이상	0.00	0.32	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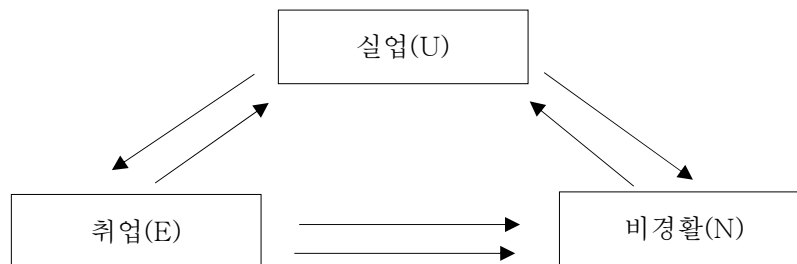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 노동시장 다이내믹스의 관점에서의 실업

노동시장 다이내믹스(아래 [그림 2])의 관점에서 실업률은 실업상태로의 유입과

실업상태로부터의 유출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취업에서 실업상태로의 유입률이 실업에서 취업상태로의 유출률보다 높을 경우 실업률은 누적효과에 의해 높아질 것이며, 실업과 비경활상태간의 유입, 유출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자가 전자보다 높을 경우 실업률은 참여효과로 인하여 높아질 것이다. 특별히 실업에서 비경활상태로의 유출은 구직활동 결과 혹은 취업난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에 의한 ‘실망실업’에 의한 경우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의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림 2] 노동시장에서의 상태가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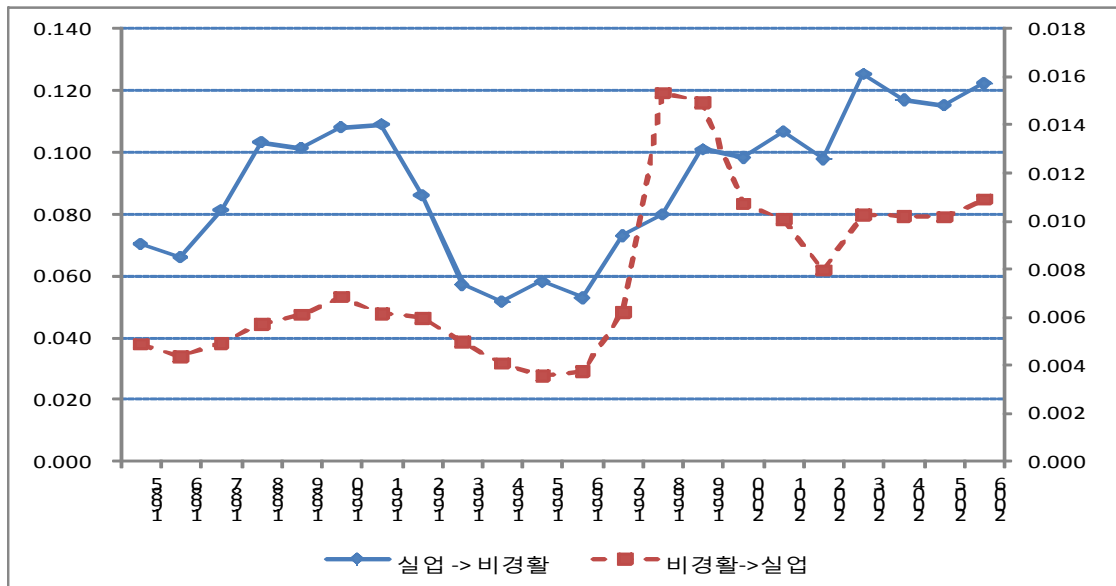


[그림 3]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실업(U)에서 비경제활동(N) 상태로의 (월간)이행률 추이를 보여준다.³⁾ 분석자료(김혜원, 2008)에 따르면 ‘실망실업’에 의한 유출률은 1980년대 후반 7%→11%대로 가파르게 높아진 후 1990년대 중반까지 다시 6% 이하 수준까지 가파르게 낮아졌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실망실업’률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2006년 현재 약 12%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10여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비경활상태에서 실업으로의 유입률은 1% 이하로 아주 낮은 상태인데,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외환위기 기간동안 급격히 상승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1% 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06년 비경활상태에서 바로 취업상태로 이동(N→E)하는 확률(3.9%)에 비교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즉 많은 비취업자들이 공식적인 ‘구직활동’ 상태(U)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업상태로 이동하는 행태(dynamics)를 보임으로써 통계상의 공식실업률은 그 만큼 낮게 집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하면 우리 노동시장의 다이내믹스는 ‘실업’->‘비경활’(U→N)로의 이동률과 ‘비경활’->‘취업’(N→E)으로의 이동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이는 구직자가 ‘실업’(U) 상태에 머무를 확률과 기간이 그 만큼 낮고 짧아 정체적(static) 통계로는 노동시장의 고용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본고에 제시된 년도별 이행확률은 각 해당 년도 월간 이동확률의 평균이다.

[그림 3] 실업(U) <-> 비경활(N) 상태간의 이동률 추이(1985-20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1985-2006)

3. 장기실업의 추이 및 국제비교

실업이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재취업이 가능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의 어려움은 덜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기회에 대한 네거티브지표로서의 실업률은 재취업율과 함께 고려됨으로써 보다 균형잡힌 현실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에는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추이를 성별로 보여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대적 단기 실업자들이 약 60% 내외를 이루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에 해당하는 비율은 약 12% 내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실업이 90%,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이 약 10%, 12개월 이상은 0.6%로 기록되고 있어 숫자상으로는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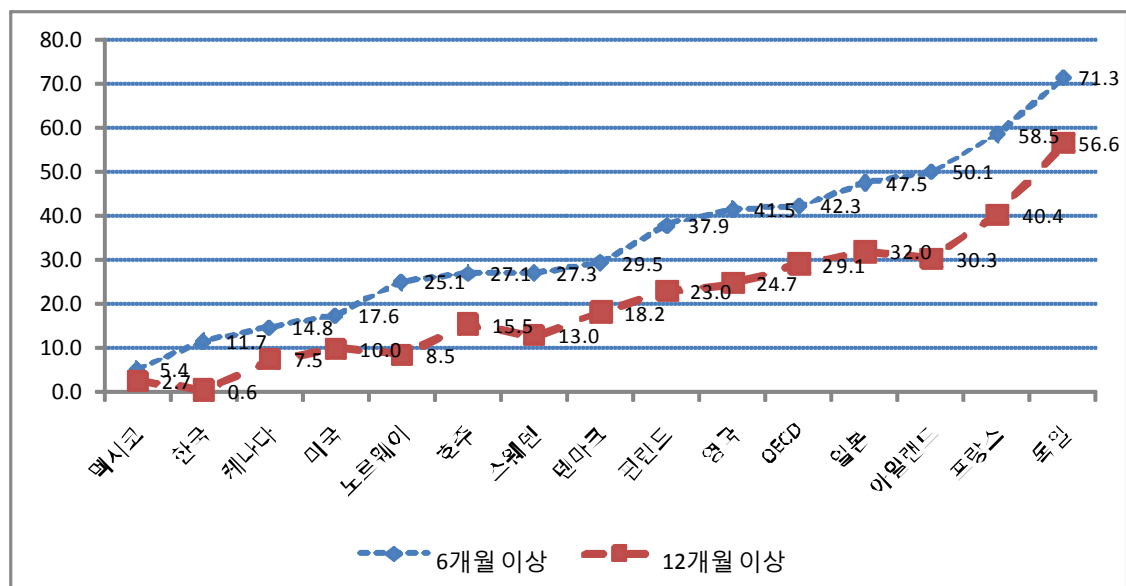
국제기준에서 볼 때도([그림 4])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멕시코,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 등과 함께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한다(OECD, 2009). 장기실업을 12개월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1% 내외의 수준이다. OECD 국가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평균 비중은 42.3%,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평균 비중은 29.1%로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표 3> 구직기간별 실업자 구성비 추이

	기간별		6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체	남성	여성
2000	59.9	25.9	14.1	16.7	9
2001	61.0	26.1	12.9	15.2	8.4
2002	58.4	27.8	13.8	16.3	9.2
2003	64.0	26.0	10.0	12.5	6.0
2004	62.3	26.3	11.4	13.4	8.2
2005	61.2	27.2	11.6	12.9	9.4
2006	61.2	27.5	11.3	12.2	9.6
2007	60.0	28.2	11.7	13.9	7.4
2008	62.3	28.0	9.7	10.6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 년도)]

[그림 4] 장기실업(6개월, 12개월) 비율의 국제비교 (2007)



※자료: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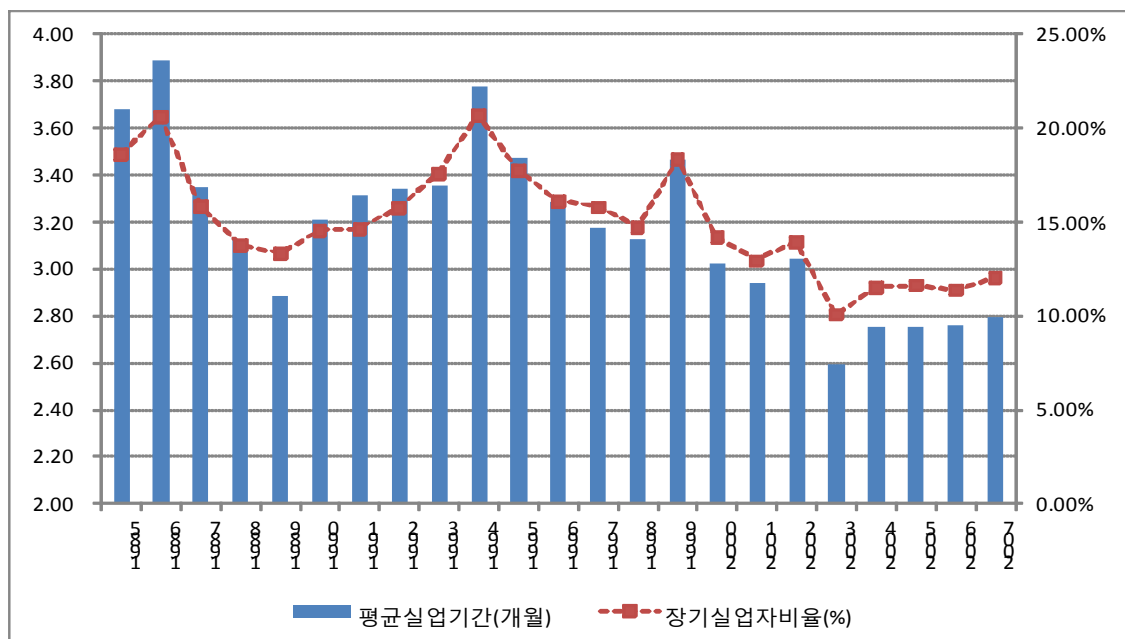
장기실업자의 이처럼 비중이 낮다는 것은 고용기회와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대로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접어드는 실망실업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실업률과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구직기간이 곧 실업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직기간

이후 실업자는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 재취업을 할 경우 구직기간이 곧 실업기간이지만, 실망이나 구직포기 등으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을 반복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실업기간을 더 길어지게 된다.

이처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장기실업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즉 직장을 그만 둔 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로 장기실업자를 측정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그러한 기준으로 파악된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전체 실업자가운데 20.8%로 나타나 국제비교 통계상에 나타난 0.6%와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4년, 16.6%, 2005년, 19.3%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 4년제 대졸 출신 고학력자들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고학력 실업시대의 노동시장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장기실업률의 장기추이는 어떠한가? [그림 5]에는 1985-2007년의 기간 동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평균 실업기간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평균실업기간과 장기실업의 비중 추이: 1985-20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1985~2007)

장기실업률의 장기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20%대를 육박하던 장기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U장형 감소-증가 추이를 보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기에 다시 18%대까지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감소해 온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의 추이는 장기실업자 비중의 추이와 유사한 양태를 보이는데 1985년 경에는 약 3.4개월이었으나, 1995년 경에는 약 3.7개월을 기록한 후 현재는 약 3개월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만큼 현재는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일정기간 관측된 장기실업자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 -> (재)취업]으로의 전환(재취업)확률과 [실업 -> 비경활]로의 전환(실망실업)확률이다. 양 측 확률 중 어느 쪽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지만,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대로, 후자의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경우 실망실업에 의한 장기실업자의 감소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업’-> ‘비경제활동’간 이동확률의 장기추이를 볼 때, 그간 장기실업자의 감소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빠져 나가는 실망실업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공식 실업률의 한계와 지표의 확장 4)

가. 공식 실업률과 현실의 간극

앞에서 정태적 실업률과 실업의 다이나믹스 분석자료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로 서베이 조사에 의한 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고용사정을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공식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실업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흔히 이해하듯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자를 모두 실업상태로 파악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아래 [그림 6]에서는 2009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력과 취업-실업-비경활 상태별 규모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되,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잠재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 가운데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50만에 가까운 인력들이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이들은 따라서 비취업 가운데 존재하는 숨겨진 실업자로 볼 수 있으며 (b),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해 현재 비취업상태에 있는 인력들 가운데도 노동시장의 여건과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잠재실업자들이 특히 여성인력 가운데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과 실제 실업상황 간에 큰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취업상태로 분류되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만 일하고

4) 본 절의 내용은 황수경(2009)에 의거하고 있다.

있는 사람들도 추가로 활용여지가 있는 부분실업 상태(a)의 노동력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에서 잠재실업(hidden unemployment)과 불완전취업(under-employment), 과소활용(under-utilization) 등을 포착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고용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6] 노동력과 취업자 구성(2009년 2월 현재)

취업자 (22,742)	취업-실업 (a)	실업자 (924)	실업-비경활 (b)	순수 비경활인구
경제활동인구(23,667)			비경활인구(16,233)	
생산가능인구(39,000)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개념의 실업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과 실제 고용사정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청년, 여성, 고령자와 같이 노동시장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한 계층이 많고 이들에서 실업 지표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하여 노동시장 정착도가 낮은, 경계에 있는 인력들(marginally attached labor force)이 많은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여성은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고용상태에 들어와 있었더라도 고용관계상 고용보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인센티브가 그 만큼 적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여성들은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업자 ↔ 비경제활동 사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청년이나 고령자 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업상태에 있는 것, 달리 표현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고(공무원 및 대기업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와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실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비경제활동 상태나 부분취업 상태에 머물면서 보다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식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긴박성,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을 포착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갖게 된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3%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공식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는 상당 정도의 잠재실업자군과 불완전취업자군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 확장된 실업 지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양한 잠재실업자의 개념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우선 구직활동의 가정을 완화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있는 잠재실업자를 포착할 수 있는데, 구직활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와 노동시장 결착도에 따라 구직단념자, 실망실업자, 경계노동자 등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다른 기준에서 취업준비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들은 비구직 사유를 기준으로 한 범주와 다소 중복되지만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행태상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자 속에 숨어있는 잠재실업자는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서 추가취업 의사를 확인하여 파악할 수 있다. 추가로 더 일하고 싶으나 현재 일거리가 없어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불완전 취업, 즉 부분실업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장된 실업자= 공식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취업자 중) 부분실업자로 구성된다.

이상의 논거에 근거하여 아래 <표 4>와 <표 5>에서 추정된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의 규모와 추이와 ‘취업자 중 불완전 취업자’의 규모와 추이를 제시한다 (황수경, 2009). 분석자료에 따르면 첫째, ‘구직단념자’(118천명), ‘실망실업자’(286천명), ‘경계노동자’(322천명), ‘취업준비자’(598천명) 등을 중복없이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잠재실업자의 규모는 공식(계절조정) 실업률에 의한 실업자의 규모 (2009.2월 현재 약 84만명)와 거의 유사한 84만~87만명에 이르고 있다. 즉 이러한 잠재실업자들을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최소 2배가 되는 것이다. 둘째, ‘18시간 미만 불완전취업자’(159천명), ‘불완전 취업자’(451천명), ‘추가 취업희망자’(739천명) 등을 포괄하는 취업자 중 ‘불완전취업자’의 규모도 130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⁵⁾

<표 4>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의 규모와 추이: 2003-2008

(단위,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직단념자	90	100	125	121	108	118
실망실업자	252	300	328	290	270	286
경계노동자	280	336	359	324	305	322
취업준비자	345	383	456	525	546	598
실망실업+취업준비자	576	661	761	790	783	844
경계노동+취업준비자	602	693	790	821	816	875

※자료: 황수경(2009b)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분석)

5) 각 하위그룹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참고도 1] 참조

<표 5> 취업자 중 불완전 취업자의 규모와 추이

(단위, 천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8시간 미만 취업자	120	177	185	173	155	159
불완전 취업자	344	470	515	469	454	451
추가취업 희망자	496	657	675	643	660	739

※자료: 황수경(2009b)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분석)

한편 실업의 외연을 확장하여 잠재실업자를 파악하려는 시도 이외에도 실업의 질적 측면, 즉 강도(intensity)를 측정하는 지표도 필요하다. 비자발적 실직자, 장기실업, 가구주 실업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특정 정책 목표에 따라 정책타겟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질 것이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경우 유사실업의 개념을 사용하여 공식통계상의 실업률과 노동시장의 체감실업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완전실업자(U-3)의 개념에 여러 가지 사유로 구직활동을 못했거나 포기한 사람 및 불완전취업 등 사실상 반실업상태에 있는 주변적 실업자(U-4~U-6)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의 실업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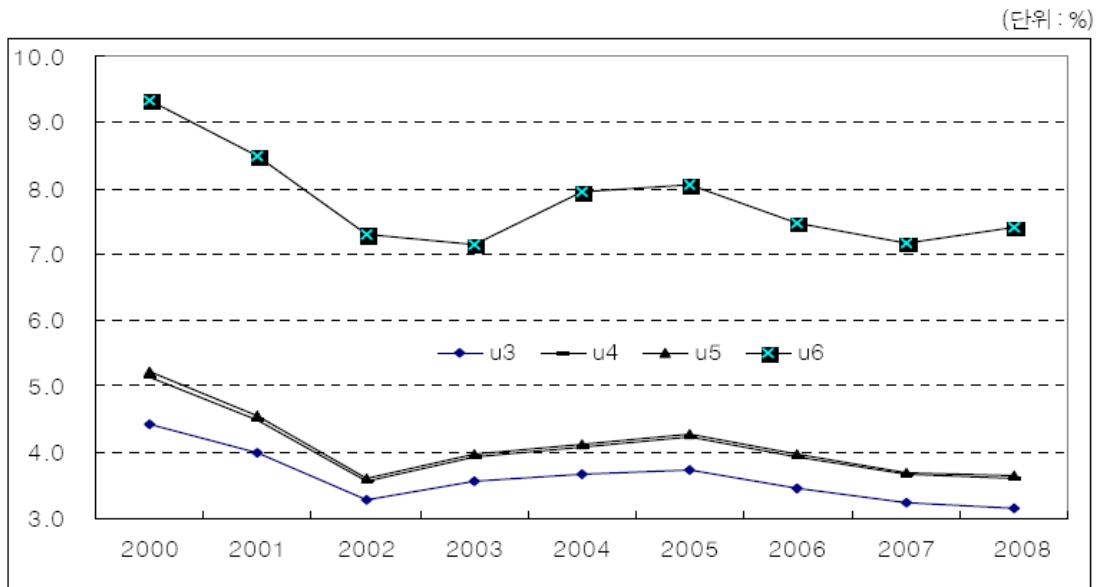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의 확장된 실업률 지표에 따라 한국의 2008(1~11월)년 공식실업률(U-3)은 3.15%인 반면, 가장 넓은 개념의 U-6는 공식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4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에는 2000~2008년 기간 동안의 한국의 유사실업률 추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공식 실업자군에 앞에서 제시한 확장된 실업지표 중 ‘잠재실업자군’을 포함할 경우의 숫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림 7] 유사실업률의 정의

U	실업률의 정의
U-1	경제활동인구 중 15주 이상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 비율
U-2	경제활동인구 중 실직자 및 임시고용이 종료된 자의 비율
U-3	경제활동인구 중 전체 실업자 비율 (= 공식 실업률)
U-4	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중 전체 실업자 + 실망실업자의 비율
U-5	경제활동인구+ 한계실업자 중 전체 실업자 + 실망실업자 + 한계실업자의 비율
U-6	경제활동인구+ 한계실업자 중 전체 실업자 + 한계실업자 + 경제적 이유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

※자료: BLS, Summary 08-06/June 2008, Issues in Labor Statistics (정성미, 2009)

[그림 8] 한국의 유사실업률 추이: 2000-2008



※자료: 정성미(2009), “유사실업으로 본 체감실업률” (월간 노동리뷰 2009-1, 노동연구원)

5.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

가.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청년층 노동시장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실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누적되고 있는 청년층 인력의 고학력화와 공급과잉과 동시에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청년층 노동수요의 감소는 생애 첫 직장으로서의 진입을 앞둔 청년층 노동시장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2008년 현재 진학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지난 1990년까지 33%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68%로 불과 10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5년 후인 2005년에는 82%까지 증가하였다(<표 5>).

<표 5> 고등교육으로의 진학률 추이: 1970-2008

년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대 학 진 학률	26.9%	27.2%	33.2%	68.0%	82.1%	82.1%	82.8%	83.8%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통계연보

한편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표 6>) 선진 제국에 비해 고용률은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중간 수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도 역시 공식 실업률만 가지고는 노동시장의 고용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표 6> 주요국의 청년층(15-24세)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2008년)

	고용률(%)			실업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한국	23.8	18.5	28.6	9.3	11.5	8.0
(15~29)	41.3	40.4	42.2	7.6	8.9	6.4
미국	51.2	52.3	50.2	12.8	14.4	11.2
일본	41.4	41.0	41.8	7.2	7.9	6.6
캐나다	59.6	58.9	60.3	11.6	13.1	10.0
호주	64.3	65.2	63.4	8.9	9.1	8.6
멕시코	48.6	57.9	39.8	6.5	6.2	6.8

※자료: OECD (2008), Employment Outlook

학교를 졸업한 후 생애 첫 정식 일자리로의 입직을 하게 되는 청년층은 일정기간의 직장탐색 및 구직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중 상당수는 '취업시험 준비' 등으로 일정기간 노동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공식 실업률로 포착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을 밖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유희화문제가 더 심각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특별부가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비취학 청년층의 미취업율이 높은 것은 실업보다는 무직인데도 실업상태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2009). 2009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10%가 취업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험준비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일반직 공무원(32.2%)」, 「일반 기업체 (18.9%)」 준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입직과정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연령은 평균 24세 정도이며 이는 대학진학률이 높아질수록 길어질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약 2년 정도 늦은 것으로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고학력 청년 노동력의 공급이 이처럼 급증한 가운데 노동수요 측면의 사정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수요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대학졸업자들의 주 구직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점차 경력자 위주의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표 7>에 제시된 대로 생애 첫 입직자들은 학교를 마친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11~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53.5%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확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취업확률이 낮고, 임금수준도 낮은 추세를 보여 '적정한 일자리'로의 첫 입직의 어려움이 청년층 노동력의 잠재실업률과 유희화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고용의 질은 이후의 근로생애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결과라서 보다 나은 첫 입직을 위한 투자와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표 7> 학교졸업자들의 첫 입직까지 소요된 기간 분포

	첫 취업 소요기간별 분포 (%)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3개월미만	3~6개월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년 이상	
2009	(53.5)	(12.0)	(9.5)	(11.0)	(5.3)	(8.8)	11개월
2008	(52.1)	(12.5)	(9.8)	(11.4)	(5.3)	(9.0)	11개월
2006	(53.5)	(11.5)	(9.2)	(10.3)	(5.3)	(9.2)	12개월
2004	(56.1)	(11.3)	(8.4)	(10.7)	(4.7)	(8.7)	11개월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보고서

6.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현황과 문제점

본 절에서는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업차원에서의 수요의 축소 등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정비정도를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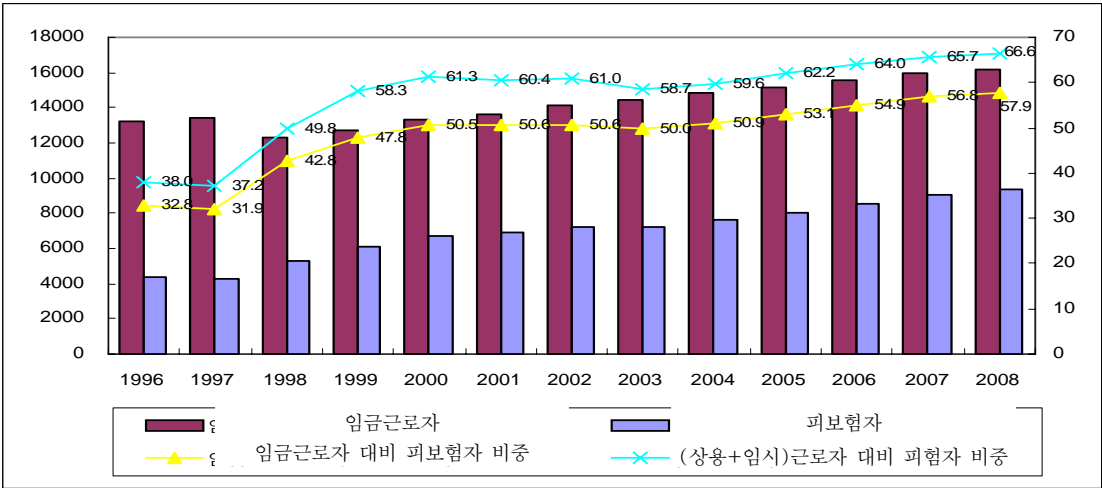
가. 적용대상

우리나라는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림 9]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의 적용율 추이를 보여준다.

제도도입 직후인 1996년에는 임금근로자 대비 약 33%의 적용율이었지만 2008년 현재 약 58%로 상승하였다. 이는 그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확대를 실시해 온 데 힘입은 바 크다.

[그림 9]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임금근로자, 상용+임시직 근로자 대비)

(단위: 천 명, %)



주: 피보험자수는 상용직 근로자만 고려하였고, 2008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통계월보』, 각 호.

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급여율

고용보험의 실업급여(<표 8>)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표 8>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적용사업장 취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50세 미만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90	150	180	210	24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08)]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급여기초일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급여의 상한은 1일 4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단 산정된 급여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있다. 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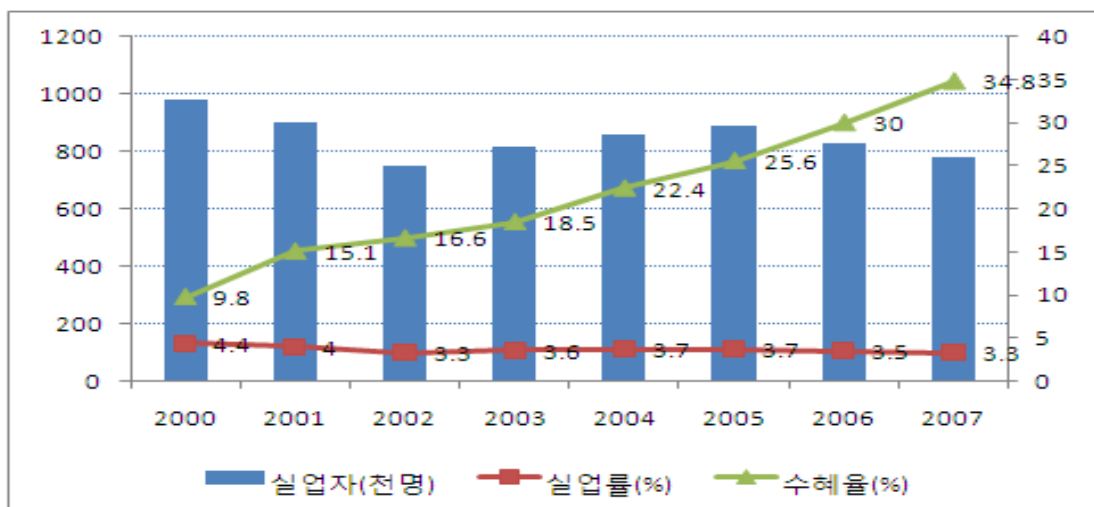
급여를 소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재취업이 어려워 직업훈련의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 개별연장급여는 개별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들에 대해 60일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기침체기에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고려할 경우 <표 8>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50세 이상(30~49세)일 경우 3(5)년 이상 피보험기간을 확보한 경우 정의상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150일 이하의 중·단기 실업기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구직급여를 소진한 경우 연장급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실업급여 수혜율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용 범위의 확대와 실질 혜택을 제고정책 등에 힘입어 실업급여의 실질 수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그림 10]). 2000년에만 해도 10% 미만에 지나지 않던 수혜율이 2004년에는 2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다시 약 35%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는 769천명이며,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306천명으로 집계되 실업급여 수혜율(=실업급여 수급자수/실업자수)은 39.6%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0] 실업률 및 실업급여 수혜율 추이: 2000~2007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백서(2008)]

이러한 수치는 실업부조를 실시하는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비율이지만, 실업보험만을 실시하는 미국(2004년 36%)이나 일본(2001년 31.7%)과 비교하면 근접한 수준이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수준과 정도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소득대체율)이 중요한 변수이다. 이중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득상한선이 있어서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들은 50% 미만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있다. 실업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한국은 36%로 다른 선진국들 가운데 중간정도의 수준이지만 급여수급률에 있어서는 36%로 미국,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표 9>).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첫째, 전체 취업자에서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둘째, 수급자격 요건, 특히 이직사유(자발적-비자발적)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이 매우 엄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나 징계해고자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할 때 평균적인 소정급여일수가 외국에 비해 짧아 통계상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다. 2007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일수는 약 120일 정도이다.

<표 9> 실업급여 수급률 및 임금대체율의 국제비교(1990년대)

(단위: %)

	급여 수급률	임금대체율
호주	95	29
뉴질랜드	114	32
오스트리아	132	34
프랑스	82	53
독일	76	48
아일랜드	142	27
네덜란드	143	58
포르투갈	77	47
영국	85	18
덴마크	103	51
캐나다	60	45
미국	34	34
일본	38	39
한국(*)	36	36

※주: 임금대체율은 전국 평균 주당 임금 대비 평균 주당 급여액의 비율임. 한국(*)은 추정치

※자료: Vroman, W. and V. Brusentsev(200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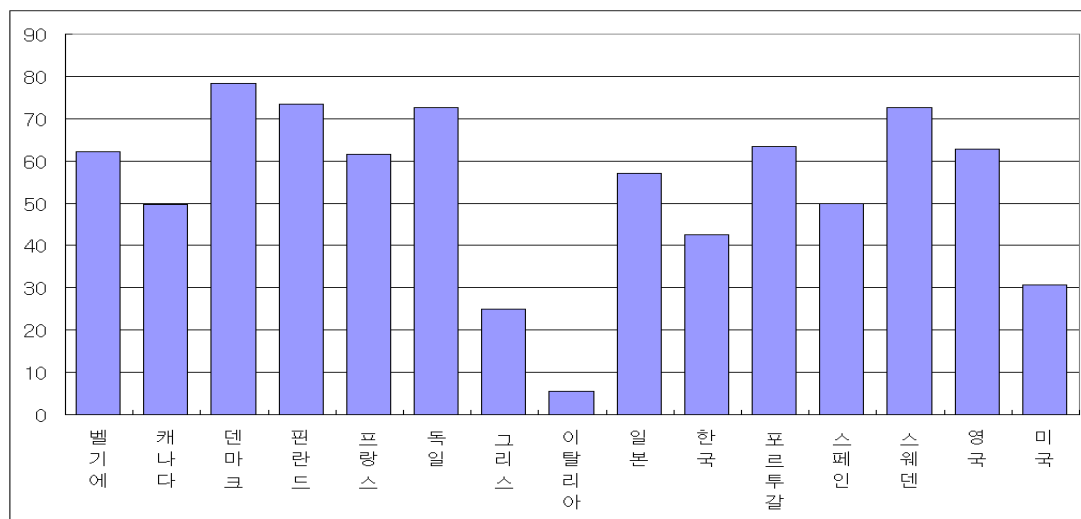
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제한된 기간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 등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는 실업부조제도가 있어서 보험료에 기반한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가 소진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실업자는 뉴딜(New Deal) 프로그램 하에 재취업과 자립을 위한 특별 고용서비스를 받게 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의 정도는 실업보험의 포괄범위, 실질 혜택을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도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의 경우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최소 50% 이상인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1]).

이상을 통해 파악되는 대로 우리나라의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형식적 적용범위나 급여수준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실질 혜택률이나 급여의 소득대체율의 측면에서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1] 실업급여+부조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자료: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7. 결론: 고용의 기회와 구조의 문제

실업은 고용구조와 노동이동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양적인 기회의 빈곤과 질적인 양극화로 성격지어질 수 있다 (방하남, 2008). 다시 양적인 빈곤의 지표는 임금부분의 상대적 협소와 자영업 부분의 과잉 비대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특히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의 빈곤이 문제이며 자영업의 경우 광범위한 영세성에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의 광범위한 존재형태는 한국에서의 고용의 질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변수이다.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성별 고용형태 분포를 살펴보면(<표 10>) 지난 20여년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온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현재 자영업의 비율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이 각각 33.2%, 32.3%를 차지하고 있어서 OECD 국가 중 멕시코 등과 함께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형태의 분포를 보면 여성들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67.7%가 임금근로자인 가운데 그 중 40.8%p는 임시·일용직이며, 남성들의 경우 66.8% 가운데 25.2%p가 임시·일용직이다. 이처럼 높은 임시·일용직의 비율은 한국 고용구조의 비정규성과 임시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여성의 고용구조가 특히 열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 가까이 증가를 하였지만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전혀 발전이 없었으며 오히려 최근 들어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성별 고용형태의 분포 추이: 1985~2006

	여 성						남 성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 업주	무급 가족 종사자
1985	48.2	37.2		10.9	21.3	37.6	58.0	49.7		8.2	37.6	4.4
1990	56.8	21.4	22.5	12.9	18.7	24.5	63.1	40.7	14.1	8.3	34.4	2.5
1995	59.6	25.5	24.2	9.8	19.4	21.1	65.7	44.4	13.1	8.1	32.7	1.7
2000	61.5	19.1	28.5	13.9	19.2	19.3	64.3	38.1	17.1	9.2	33.8	2.0
2003	65.6	23.2	31.0	11.4	17.8	16.7	64.7	39.6	16.7	8.4	34.0	1.3
2004	66.6	24.4	30.6	11.5	18.6	14.8	65.6	40.4	16.7	8.4	33.1	1.3
2005	67.1	25.6	30.2	11.3	19.0	14.0	66.0	41.1	16.4	8.5	32.8	1.3
2006	67.7	27.1	30.0	10.8	18.8	13.5	66.8	41.5	16.6	8.6	32.0	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11>에는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나타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주로 비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모두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있고 보수가 높은 비정규직 일자리도 있으며,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이동이 잦다면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위한 숙련형성 단계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비정규직의 과다한 비율은 노동의 질에 대한 부정적인 표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정규-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취업자수 및 비율

(단위: 천 명, %)

	정규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일일 근로	특수 근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기간제 근로						
2002	10,190 [72.6]	3,839 [27.4]	2,063 (53.7)	1,536 (40.0)	807 (21.0)	412 (10.7)	772 (20.1)	93 (2.4)	332 (8.6)	236 (6.1)
2003	9,542 [67.4]	4,606 [32.6]	3,013 (65.4)	2,403 (52.2)	929 (20.2)	589 (12.8)	600 (13.0)	98 (2.1)	346 (7.5)	166 (3.6)
2005	9,486 [63.4]	5,483 [36.6]	3,615 (65.9)	2,728 (49.8)	1,045 (19.1)	718 (13.1)	634 (11.6)	118 (2.2)	430 (7.8)	141 (2.6)
2007	10,180 [64.1]	5,703 [35.9]	3546 (62.2)	2,531 (44.4)	1201 (21.1)	845 (14.8)	635 (11.1)	174 (3.1)	593 (10.4)	125 (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8월.

마지막으로 한 사회가 가진 고용구조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정도는 종합적으로 근로생애 동안의 근속기간을 통하여 보다 잘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서는 평균근속기간을 약 6년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을 포함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할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4.5년(남성, 5.6년; 여성, 2.9년)으로 평가된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에서의 평균 근속년수인 약 10년(일본의 경우 11.6년, 영국은 8.2년, 가장 짧은 미국도 6.6년)의 1/2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실업은 한 사회의 노동시장이 포함하고 있는 고용기회의 양과 질 그리고 주어진 구조 하에서의 노동이동이 낳는 결과이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업실태는 수요-공급간의 불일치로 인한 마찰적 실업으로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적 실업,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 등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은 고용구조가 열악한 상태 - 즉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 - 에서 부문간 혹은 고용형태간 노동이동이 낮은 경우일 것이다. 현재 한국

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상태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아닌가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의 고용정책은 시계열적 실업률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응적 처방보다는 열악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장기적 투자와 노력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고용중심의 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실업에 대한 공공정책과 투자는 고용현실과 거리가 있는 공식실업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확대 실업률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실업보험) 역시 공식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광범위한 잠재 실업자군을 고려하여 제도의 외연을 확대하고 내연을 충실하게 보완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도 1]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중 확대된 실업개념에 따른 세부 집단구분

(단위: 천 명)

〈실업자〉		
공식 실업자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	769
비자발적 실업자	이전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사업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실업자	235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	290
가구주 실업자	실업자이면서 가구주인 자	333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118
실망실업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286
경계노동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322
취업준비자	취업을 위해 학원 등에 다니거나 준비중인 자	598
잠재실업자 1	실망실업자 + 취업준비자	844
잠재실업자 2	경계노동자 + 취업준비자	875
〈취업자〉		
18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18시간 미만 일하였으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159
불완전 취업자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451
추가취업 희망자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7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원자료.

[참고문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85-2005), 각 년도
----- (2008), [고용보험백서(2008)]
- 금재호(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2008), “노동시장 이행확률분석: 1985-2006,” 이병희 외(2008),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고용변동」,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2009), “노동과 삶의 질”, 「사회동향과 삶의 질」 정책포럼(통계개발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주최) 발표자료.
- 외(2008),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 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외(2008), 「통계로 본 노동20년」,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2-2006) 보고서,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85-2006) 보고서, 각년도 .
- 황수경 (2009a),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의 진단,” 노동리뷰(월간) 2009-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2009b), “잠재실업의 구조와 규모,” 노동리뷰(월간) 2009-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2009), “유사실업으로 본 체감실업률”, 노동리뷰(월간) 2009-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4, 2005, 2006, 2006, 2008), 각 호.
-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08), "Summary 08-06/ June 2008, Issue in Labor Statistics.
- OECD(2008), *Employment Outlook: 2008*.
- (2007), *Employment Outlook: 2007*.
- (2006),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 Vroman, W. and V. Brusentsev(200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Werner, H. and W. Winkler(2004), *Unemployment Compensation Systems: A Cross-Country Comparison*, IAB Labour Market Research Topics, 56.